시 론

무등산 케이블카, 광주 관광의 랜드마크로 키워야

김 미 남
前 청와대 행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최근 전남 구례군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자 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덕유산, 내장산, 설악산, 한려해상 등 타 지역 국립공원은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돼 관광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와 인접한 전남에도 목포와 여수에 케이블카가 있다. 바다 위를 통과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다. 2014년 12월 개통한 여수 자산공원 케이블카는 돌산공원까지 1.5km 구간을 왕복한다. 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바다 위를 통과했다. 2019년 9월 목포 고하도에서 유달산을 거쳐 북항까지 왕복하는 케이블카를 준공했다. 스테이션을 두고 연결하는 3.23km 거리다. 모두 도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시간에 따라 도시 풍경과 야경, 노을, 밤바다를 볼 수 있다.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어떨까?

광주는 무등산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다. 특히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왜 유독 무등산에만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걸까? 야생 동식물 보호와 자연 그대로 보존해 후세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려는 그 마음과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거라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환경단체와 반대하는 측에서 우려하는 환경파괴 문제는 현대의 건축기술 발달로 크지 않다. 과거처럼 건축 기자재를 옮기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 도로를 내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지 않아도 된다. 전체 건축물을 부분으로 나눠 공장에서 반완성품으로 만든 다음 대형 헬기 등으로 옮겨 조립하는 친환경방식으로 설치하면 될 것이다. 국토의 73%가 산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을 이용하지 않고 성장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부 케이블카 찬성자들의 주장이다.

국내·외 급변하는 정세와 환경 변화로 인해 시대가 달라졌다. 광주도 그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무등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

2017년 한국관광공사 국민 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국내 여행 시 관광 여행 주요 활동에 '자연 및 풍경 감상'이 1순위를 차지했다. 자연과 관련된 활동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광주'하면 떠오르는 무등산인데도 이 같은 선호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 외부인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는 관광 꺼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 광주에서도 청년이 떠나고 있다. 지난 12일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1천300명), 30대(-631명)의 비중이 67.6%를 차지해 순유출이 가장 많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떠난 이유로는 직업, 자연환경, 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자연환경 영향처럼 청년이 떠나는 곳이 아닌 즐거움을 찾아오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전남 목포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후 운행 70일 만에 이용자 수가 42만 명을 돌파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침체됐던 조선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목포시는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각각 791억 원, 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 화산, 장가계 천문산, 대만의 아리산과 함께 약 2천600여 개 케이블카로 연간 6천600만명의 방문객이 유입되는 오스트리아 등 해외 우수한 사례는 많다.

광주 관광의 랜드마크로 키워야!

무등산 케이블카는 광주시민의 일상 생활권에 인접해 있고, 도심 전망도 뛰어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무등산을 끼고 양림동, 아시아문화전당, 국립5·18민주묘지 등 5·18 역사 관련 장소까지 다양하게 이어지면 성공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광주의 랜드마크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키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1년 전부터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해 오랫동안 쓸 건지 말건지 고민해 왔다. 환경단체의 심한 반대도 잘 알고 있다. 주변의 가까운 지인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에 이의제기가 있을법하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럼을 쓴 이유는 하나다. 반대 측 의견도 소중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 고

국민연금, 청년이 믿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인가?

설 명 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내가 낸 연금, 나중에 못받는다는데 왜 내야하죠."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수십년 뒤 받을지도 모를 연금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는 제도일까? 과연 우리가 지금 외면해도 괜찮은 것일까?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이다. 19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이러한 오해가 더욱 커져왔다. 과연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일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6년도에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하는데 설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 3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소진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며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해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그때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 오해, "국민연금이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봤다는데?"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988년부터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885.0조원이고 이것으로 기금을 운용해 낸 총 누적 수익금은 756.7조원이며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한 404.4조원을 빼고도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1천237.3조원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했는데 2023년에는 126.7조원, 2024년에는 역대 최고 159.7조원의 수익을 냈다. 참고로 작년 수익금인 160조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4.9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2023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금 적립금도 2023년에는 1천조를 찍고 2024년에는 1천213조로 급상승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다"이다. 매월 200-300만원 정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99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제도의 성숙 기간이 짧아 많이 받는 수급자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2025년4월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88만9천명,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7만7천명으로 고액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개인 최고 연금액 319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평생 소득으로 만들 수 있고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이다. 단지 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어떤 금융 상품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60세 이후의 자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노후는 오고 은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그 시간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절차이고 저축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 장수 리스크를 커버하기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일수록 공적연금의 보호망이 더 절실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정치권의 개혁의지도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청년세대에 돌아올 수 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탈북민 향한 따뜻한 관심이 우리의 힘

낯선 땅, 낯선 환경에 첫발을 내디딘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소중한 이웃이자 동포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의 조명도 줄고 대중의 관심도 옅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건네야 한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은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 옆집에 사는 탈북민 이웃에게 먼저 인사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탈북민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노력도 중요하다. 탈북민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소중한 동포다. 탈북민들은 통일의 씨앗이자 마중물이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모여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장규·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위한 특별지자체 타진 환영

특별자치도 설립에 주력해온 전남도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로 방향을 틀었다. 비교우위 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해양자원 맞춤형 특례 등 분권 강화를 골자로 특별법도 마련한다. 이달 말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이 그 시작인 셈이다.

전남도는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들과 소통하며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 전남은 인구감소·고령화·청년 유출 등 소멸 위기의 최전선으로 타 시·도보다 강도높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특화된 권한과 자치권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 참여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실행 동력을 얻었다. 특히 지역 균형성장 정책으로 자치권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됨으로써 광주·전남 행정통합 가능성까지 힘이 실렸다.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으나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이고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광주·전남이 선도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시도민과 정치권 등이 한목소리를 내 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김 지사가 언급한 대로 장기적으론 대구·경북, 충청권 등에서 가시화된 행정통합의 전 단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2년 7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합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은 사활이 걸렸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실질 지방분권을 개척하는 출발선에 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광산구·여수 선도사례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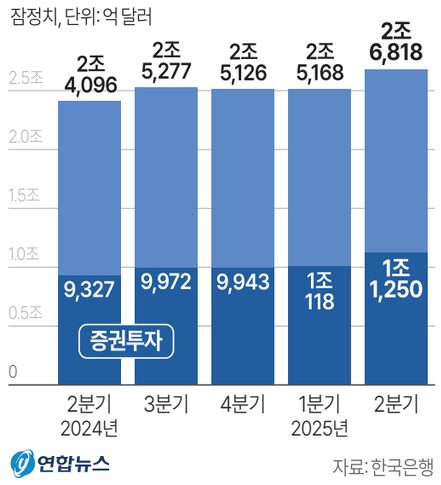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 시작된 가전업계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올해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인한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2곳을 처음 지정했다. 지자체가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민관 합동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이끌어낸 결실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이 고용 지표에 충격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한계를 감안해 지난 7월말 신설된 제도다. 상시화된 일자리 위기 가능성에 대해 적시에 포착·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기로 했고, 광산구 또한 고용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도하고 있다. 광산구와 여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있어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사전 대응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선도사례가 되는 만큼 가시적 효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여수시,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정성요건 평가를 위해 전문가 참여하에 각각 5월과 7월 현지실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구직급여 신청자, 사업장 수 등 4개 정량요건에서는 모두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6개월 이후 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픽 뉴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해외 주식 매입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투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6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6천818억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 말(2조5천168억달러)보다 1천651억달러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2분기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천250억달러)가 한 분기 사이 1천132억달러(지분증권 +956억달러·부채성증권 +175억달러) 불어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1조6천514억달러)도 2천186억달러 늘었다.

2020년 4분기(+2천403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이처럼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2천186억달러)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1천651억달러)을 웃돌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1조340억달러로 1분기보다 536억달러 줄었다. 두 분기 연속 감소지만, 작년 4분기 말 사상 처음 '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흑자국' 반열에 오른 뒤 세 분기 연속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 무 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